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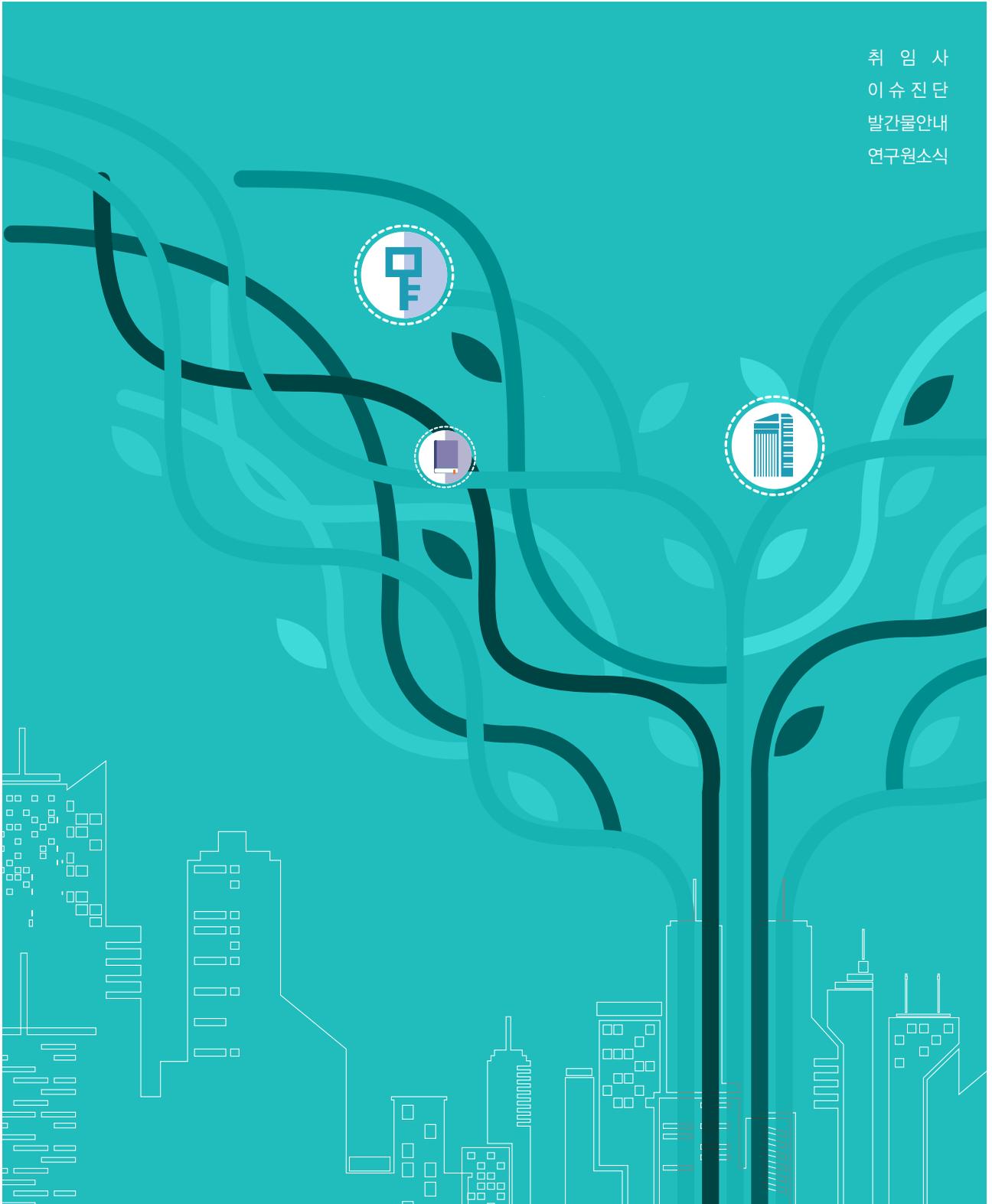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뉴스레터

43호 2015년 12월

등록일자 2014.09.24    등록번호 동자 라00076    발행일 2015년 12월 발행(43호)    발행인 신홍균    편집인 박상우    발행처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기획·편집·인쇄 경성문화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는 매월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본원의 동정을 비롯하여 전문건설 관련 정책·제도의 주요 동향과 최신정보를 제공합니다.

취 임 사  
이 슈 진 단  
발간물안내  
연구원소식



# 취 임 사

Inaugural Address



존경하는 전문건설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제4대 원장으로 취임한 박 상 우 입니다.

제가 건설부에 사무관으로 첫발을 디딘 1985년은 때마침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창립하여 건설업의 당당한 주역으로 면모를 일신한 때였습니다. 이후 30년 동안 건설정책을 맡아 일하면서 때로는 전문건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기도 했고, 때로는 먼발치에서 전문건설업 발전을 성원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계의 괄목할만한 도약과 궤를 함께 하면서 성장한 제가 여러분의 부름을 받아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에 취임한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예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수년간의 경기침체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부와 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도급거래에서 억울한 대우를 받는다는 업계 분들의 말씀에 얼마 전까지 건설당국에 몸담고 있던 저로서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문건설업계가 활력을 되찾고 한껏 도약할 수 있는, 그리고 제대로 대우받으며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제게 주신 사명이라 여깁니다. 앞으로 업계의 숙원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내외로 전문건설업 시장을 개척하고, 열심히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하는데 제가 쌓은 모든 경험과 자원을 동원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훌륭한 전임 원장님들의 지휘 아래 전문건설업계의 권익확대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괄목한 성과를 냈습니다. 저는 그 동안의 성과에 더하여 직원의 자질을 계발하고 연구의 질을 높이며 시스템을 발전적으로 혁신하여 전문건설업은 물론 우리나라 건설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작지만 강한, 경쟁력 있는 연구원으로 한층 도약시키겠습니다. 모든 직원이 자신의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탁월한 성과를 내고 보람을 찾는 조직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연구원을 산학연관 네트워킹의 중심축으로 삼아 전문건설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내고, 전문건설업의 우수성과 국가경제에서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지런히 찾아뵙고 경청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 그리고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새해에도 모든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고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박 상 우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2006년 이후 9년 만에 단행되며, 사실 상 제로금리 시대의 종언을 고하였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촉발된 경기 변화와 더불어 산업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올해 주택시장을 필두로 오랜만에 기지개를 펴던 건설시장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전통적으로 건설업은 금리와 유동성을 근거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이 건설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몇 가지 예상되는 그림을 살펴보자.
- 첫째, 거시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국내 건설시장의 경우 단기적인 침체가 예상된다. 공공부문의 경우 SOC 투자(20,5조원)가 작년대비 감소할 것이며, 민간부문도 금리 인상과 유동성의 감소로 인해 일시적인 침체 상황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스레 건설경기에 대한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둘째, 해외시장의 경우 원자재 가격의 급락으로 중동 등 해외건설 발주가 활발한 국가들의 재정 위기로 신규 발주의 감소 및 취소가 예상된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환율 상승에 의한 환차익이 예상되지만, 오히려 건설자재의 상승이나 해외시장의 규모가 작아지는 부분에 의한 타격이 더 클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환차익에 대한 기대보다는 경쟁심화와 수주감소를 걱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국내시장의 어려움을 뚫고 해외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 또한 계획의 수정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 셋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될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자금조달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2년 이후 최저 수준인 건설업종 회사채 신규 발행과 부정적 신용전망 그리고 금융권의 건설업체 기피현상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실질적인 영업이익률의 추세적 감소를 더하면 건설업의 유동성 경색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계속되리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금리인상 기조에 대한 FRB의장인 윌런의 발언 중 '완만하게(gradual)'라는 코멘트는 금리 인상의 프로그램이 계속하여 가동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화된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 평가 및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이에 대비하여 건설기업은 몇 가지 중요한 플랜을 가져야 할 것이다. 첫째, 현금자산을 비롯한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둘째, 자금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 예를 들어 저가 수주를 지양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CEO들은 '자장격지(自將擊之)'의 마음으로 격전지가 될 시장을 잘 살피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 국토교통부의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으로 소규모 개발·지역투자 활성화 예상

•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소규모 개발 및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규제 완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일조기준 개선 등 11건의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1만㎡가 넘는 단절토지도 3만㎡ 미만 이내에서 해제 허용, 개발제한구역 사업 추진 시 특수목적법인의 민간출자지분 확대(2/3 미만) 적용 기간 연장(2017년 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에 동물보호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허용, 200K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 허용, 복합 건축물 내 공동주택의 위치(층수)에 따른 탄력적인 일조기준 마련, 약사법에 따른 도매영업소를 창고시설 건축물 내 함께 설치 허용, 인쇄업소 용도 건축물 면적 산정 시 소유자별 면적규모 산정 방식으로 개선, 매장문화재 보전을 위한 보호시설 마련 시 건축기준 완화(바닥·건축면적 제외), 자연녹지지역 내 초·중·고교 및 대학교의 경우 조례로 건폐율 30%까지 허용, 행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차장을 연면적에서 제외하여 용적률을 완화, 초·중·고교 및 대학교와 동일하게 유치원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등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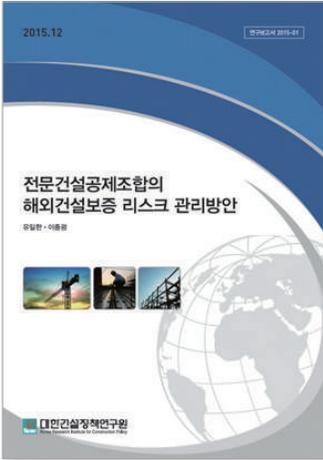
•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약 3,600억 원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신규 투자 증가, 기업 활동 제약 제거 및 일자리 창출, 문화재 보존 기여, 교육시설 확충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의 주거안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 14개 광역 시·도별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규제 프리존(Free Zone)' 도입

• 정부는 지난 16일 '2016년 경제정책 방향'과 '규제 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부산·광주·대전·강원 등 14개 시도에 2개씩(세종시는 1개) 총 27개의 규제 프리존을 만들어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부산 해양관광, 사물인터넷(IoT) 융합 도시기반서비스 △대구 자율주행 자동차, IoT 기반 웰니스산업 △광주 수소융합스테이션, 전력변환 및 저장 △대전 첨단센서, 유전자의학 △울산 부생수소 활용, 3D 프린팅 △세종 에너지 IoT △강원 스마트 헬스케어, 관광 △충남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충북 바이오의약, 화장품 △전남 에너지신산업, 무인기 △전북 탄소산업, 농생명 △경남 지능형 기계, 항공부품 인증 △경북 스마트기기 타이타늄 △제주 스마트 관광, 전기차 인프라 등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이 규제 프리존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에 방해가 되는 업종, 입지, 용·복합 등 규제 대부분을 풀 예정이고 민감한 규제도 규제 프리존에 한해선 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 규제 프리존은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투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규제 프리존은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지역산업이 특성을 발휘하기에 매우 효과적인 정책으로 보인다.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규제 프리존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후속조치의 신속한 추진을 기대하며, 이에 대한 지역개발 특성화 플랜에 맞춘 산업별 맞춤형 건설 전략이 필요하다.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해외건설보증 리스크 관리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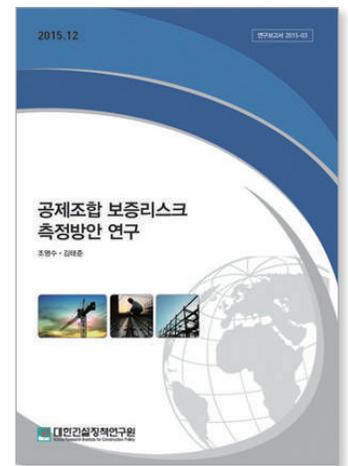


- 본 연구는 향후 전문건설업계 해외진출 활성화에 대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해외보증 리스크 관리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 해외건설 리스크 관련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조합 내부적인 리스크 관리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였고, 해외보증 리스크 관리를 위한 외부 시스템 활용 및 내부 시스템 구축 방안을 6가지로 제시하였다.

구분	리스크 관리방안	
	1. 외부 시스템 활용 방안	2. 내부 시스템 구축 방안
단기 과제	해외건설협회 사업성평가 활용 (해외건설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전문건설해외공사 리스크 DB 구축 (해외건설 리스크 체크리스트 연계)
중기 과제	FIRMS 하도급리스크 평가 활용 (하도급리스크 체크리스트 개발)	전문건설해외공사리스크지수 개발 (리스크지수(ISRI)의 보증업무 활용)
장기 과제	해외공사 수행역량평가 체계 구축 (전문공사 수행역량평가 지표 개발)	조기경보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해외공사 리스크 관리 수준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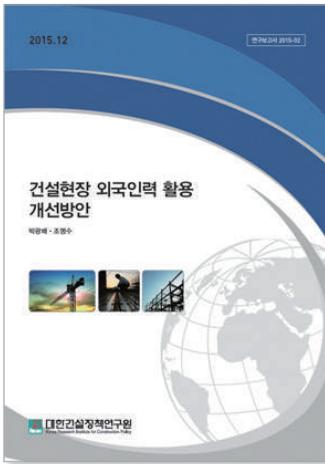
## 공제조합 보증리스크 측정방안 연구

- 본 연구는 공제조합 보증리스크 측정방안에 대한 2차년도 연구과제로 여신·연체·압류를 이용한 특이패턴 분석과 조합원의 내·외부 리스크를 고려한 보증리스크 모형 연구로 이루어졌다.
- 여신·연체·압류를 이용한 특이패턴 분석에서는 조합원의 여신·연체·압류에서 나타나는 특이패턴을 정의하고, 확률적 통계기법을 통하여 각 부실징후 상태에서의 부도확률을 분석하였으며, 100개의 부도업체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제공하였다. 조합원의 내·외부 리스크를 고려한 보증리스크 모형 연구에서는 재무, 부실징후(여신), 보증채권자 등 현재의 시스템에서 고려되고 있지 않는 리스크 영역을 변수로 새로운 모형을 추정하였다.
- 각 연구를 통해 공제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활용 방법의 기초적 연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 건설현장 외국인력 활용 개선방안



- 본 연구는 건설현장에서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를 통해 활용하고 있는 외국인력에 대해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개선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건설업에서 외국인력 활용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발주되는 공사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외국인력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데, 해당 공사에서 외국인력 활용방안에 필요한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 개선방안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노동력 부족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외국인력 쿼터의 상향을 논의하였다.

연구 소식

---

Information Center



### 제4대 박상우 원장 취임

- 본원의 제4대 원장으로 박상우 前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선임되어, 2015년 12월 15일 취임식과 함께 업무를 시작했다.
- 박상우 원장은 부산 동래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가천대에서 도시계획전공으로 공학박사를 받았으며, 1983년 행정고시 27 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교통부에서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국토정책국장, 주택토지실장 등을 역임했다.